

기고

예방이 최고의 소방, 신고가 안전을 지킨다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단 한순간의 방심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비상구 폐쇄·차단, 소방시설 차단과 같은 불법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이 제도는 누구나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목격했을 때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재난을 예방하는 실질적 장치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에서 소방시설은 곧 생명의 통로다. 그러나 비상구가 막히거나 소화전이 불법으로 차단된 상태라면 화재 시 대피와 초기 대응이 불가능해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된다. 신고포상제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예방이 최고의 소방'이라는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화재 없는 안전한 사회는 소방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높은 안전 제도다.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정재성

필자는 캄보디아에서 침향 사업과 관련 캄캄(Kampot)에서 2년 거주한 경험이 있다. 한국 대학생이 고문으로 죽은 보코산(Bokor mountain)에 여러 차례 등산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중국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이 온 오프라인을 통해 한국 젊은 청년을 현지(시아누크빌, 벤치 범죄 단지 등)로 유인해 납치하여 감금하고, 폭행, 전기 고문을 당했다는 뉴스가 매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심지어 지난 8월 20대 학생이 대학 선배가 소개해 준 박람회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캄캄주(州)의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가 쏟아져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캄보디아와 관련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판단력, 일확천금의 꿈을 실현하고자 접근한 우리 젊은이들의 급박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예기(禮記) 곡예편(曲禮篇)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入境而問禁(입경이문금), 국경에 들어갈 때 국법으로 금한 것을 묻고, 入國而問俗(입국이문속), 수도에 들어갈 때 그 나라 풍속이 어떠한지를 묻고, 入門而問諱(입문이문휘), 문에 들어갈 때 그 집안이 꺼리는 것을 물어라."라는 가르침이 있다. 이런 메시지에서 시사하듯 낯선 외국을 방문할 경우, "고소득 보장" "여행지 안전 정보" 등 상해과 파악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앞선다.

캄보디아 역사는 자야바르만 시대(고려시대)에 중국 원남성, 미얀마, 베트남, 태국을 지배하는 봉신 국으로 크메르 제국의 전성기를 누렸고, 그 후 전쟁과 내전을 거듭하면서 쇠약해져 프랑스, 일

칼럼

이동환 AOU대학교 전 교수



캄보디아 이해 부족이 큰 사건을 자초했다

본 지배받다가 냉전 시대를 맞이하면서(1975년) 폴포트가 집권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1/4에 해당하는 지식인, 과학자를 포함 200만 명이 학살당했다. 그 후 캄보디아-베트남 전쟁에서 훈센 총리가 사단장으로 참여하여 큰 공을 세운다. 폴포트 정권이 무너지면서 훈센이 귀국하여 총리가 된다. 이때 베트남 여자 분라니(Bun Rany)를 만나 결혼하게 되며 장자 훈 마넷 아들을 두었다. 그는 20대에 미국 육사를 졸업하고, 영국에서 철학 박사학위 받고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후 54세에 총리가 되었다.

이런 역사적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지식인 몰살로 국가 제도 정비가 부실했고, 국민보다 귀족층 위주로 편향된 정책이 펼쳐왔다. 예컨대, 법정 재판에서 변호사가 부족하여 검사가 변호사 대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으며, 대학교 지식인이 부족하여 주로 스님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 군 장교가 되려면, 국가에 일정 금액을 기부해야 제복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부금 제도가 개인 비리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내부구조이다.

내가 체험한 사례이다(2007). 일반 외

국인이 버스, 택시를 이용하면 요금을 배로 요구한다. 외국인이 토지 매매를 하면 반드시 군수, 도지사를 만나게 유도해서 발전 기금 명목으로 내게 하고, 오토바이나, 자가용 이용 시 교통법규 위반하면 자국민보다 배로 부과하며, 현장에서 현금을 요구한다. 명산(보코산) 등산 시 입장료는 배로 받는다. 외국인이 일정 기간 체류하면 경찰이 수시로 감시하며, 찾아와서 기쁨값, 수리비를 요구하는 등 외국인이 살기 힘든 국가이다.

이러한 캄보디아 일상생활은 외국인에게 차별화하여 종종 외국인인 것 같고, 마찰이 빚기도 한다. 이런 나라의 수준과 생활양식을 모르고 가면 당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가장 취약한 것은 언어가 소통 부재로 인간적인 마음이 통할 수가 없다.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僑民)의 실상 인식이 중요하다. 프놈펜시와 시엠립에 사는 인구가 모두 8천여 명이다. 이들은 열악한 캄보디아에서 사는 자체가 불행이다. 그들은 한국에서, 경제법, 조폭, 마약, 사기 등으로 도주하여 불법체류로 사는 사람이 다수이다. 비단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유

럽 등 이런 나라의 사람들도 같은 현상이다. 한국에서 온 목사, 승려들은 목회 활동이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캄보디아인을 대상으로 복음 활동하면 현금 가치가 낮아 생활할 수가 없다. 1달러의 가치가 캄보디아 화폐 4,000 리얼이다. 그래서 한국기업에 손 내밀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사기꾼 목사로 전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에서 ODA 지원금을 꾸준히 지원해 왔고, 부영건설이 부영 회장이 캄보디아 영세한 전국 초등학교에 피아노 300대를 기증함과 음양으로 현지 한국기업의 초·중 교에 신축 화장실 기부하는 등 많은 지원을 해왔다.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캄보디아 소굴에서 아직도 탈출하지 못하고 신음하는 우리 국민 소제 파악이다. 가해자, 피해자가 다수 우리 국민일 수 있다. 이것부터 철저히 수사하여 다시는 국제적 사기 집단, 마피아 조직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 이번 기회에 캄보디아 내 불법 체류 경제범을 색출하여 한국인의 불명예를 씻고, 새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캄보디아는 한국 결혼 이민자 수가 5천 명이 넘는다. 이들의 조국을 지나치게 폄하해서 안 된다.

우리는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의 귀족들의 처세와 일반인의 생활상을 잘 이해하고 조화롭게 대응하면 큰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지피지기,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이란 명구가 떠오른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이 송암 발행인·대피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신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525-9775 <팩스> (062)528-4566
회장실 (내선)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 (주)대원인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년 36,000원

기자수첩

농협의 바람직한 경영을 바라며!

농협의 로컬푸드 신축 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바람직하고 정당한 절차는!

- 1. 사업 계획서 수립
- 사업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을 명확히 기술
- 대상 부지 선정, 사업 범위, 예상 비용 및 예산 계획 포함
- 기대 효과와 위험 요소 분석
2.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환경 영향 등을 평가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실시
- 전문 컨설팅 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획의 실현 가능성 검토
3. 사업계획서 수정 및 보완
- 예비 조사 결과와 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내용 보완
- 재무 계획, 일정, 인력 배치 등 구체화
4. 총괄 사업계획서 완성
- 모든 내용을 통합한 최종 사업계획서 작성
-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확인
5.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장, 이사, 감사,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추진 과정 점검 및 자문 역할 수행
• 위원회에서 사업 진행 상황과 문제점 검토
6. 사전 조사 및 준비 작업
• 부지 현황 조사, 인허가 요건 확인
• 조합원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
7. 이사회 심의
•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서와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 문제점이나 의혹 발생 시 추가 검토 요구
8. 총회의 승인
• 조합원 총회에서 최종 사업계획 승인 여부 결정
• 충분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조합원 동의를 확보
이러한 절차는 투명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곡농협은 이러한 절차들을 무시하고 토지 매입과 관련해 여러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김준형 동곡농협본부장

습니다.
업무상 배임 의혹 및 절차 위반
1. 동곡농협은 조합원과 이사회의 승인 없이 2억 700만 원 규모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서 작성일(1월 6일)과 이사회 승인일(1월 22일)이 맞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

습니다.
2. 총회에서 매입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일부 농취득과 기록을 삭제해 승인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3. 농협 정관에 따르면 1억 원 이상의 부동산 매입 시 이사회와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무시했습니다.
가격 선정 부적절 및 허위 서류 작성
1. 토지 예상 매입 가격은 평당 90~100만 원 수준이었으나, 실제 매입가는 평당 150만 원으로 부풀려졌습니다.
2. 감정평가서에는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중요 문구가 누락되어, 의도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숨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3. 농협 측은 계약 당시 '가계약'이라고 주장했으나, 계약서에 관련 문구가 없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개발제한구역 은폐 및 폐기물 매립 사실 은폐
1. 해당 토지는 광산구정기 건축물 설치가 어렵다고 명확히 밝힌 개발제한구역임에도 이를 숨기고 매입을 강행했습니다.
2. 토지 내 다량의 건설폐기물(오니, 슬러지 등)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드러났으며, 농협은 매입 당시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조합원들은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 광산구청은 중간층 성토물에 대한 중금속 검사 없이 육안 확인만으로 '폐기물이 아니다'고 결론 내려 논란이 되었습니다.
용도 변경 노력 부재 및 로컬푸드 사업 관련 문제
1. 농협은 로컬푸드 판매장 조성을 명목으로 토지를 매입했으나, 광산구청은 해당 토지에 로컬푸드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2. 농협은 4년간 로컬푸드 사업 지원 사유를 민원과 행정기관의 소극적 대응 탓으로 돌렸으나, 이는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3. 농지 취득 목적을 '농업생산물·시범포장 운

영'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사업진행과 관련된 행정 절차는 부실했습니다.
법적 조치 및 감사 요구
1.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허위 또는 부정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불법 폐기물 매립과 은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추가 법적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3. 조합원들은 동곡농협의 불법 매입과 절차 위반에 대해 철저한 특별감사와 사법적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동곡농협은 내부 규정과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허위 서류와 부당한 가격으로 매입했으며, 폐기물 매립 사실을 은폐한 정황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곡 농협 사례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토지 매입이나 대규모 예산 집행 시에는 반드시 사전 계획서 작성과 충분한 내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